

업무대행사에 꼼짝없이 당한 분양사가... 피해 눈덩이

자산주택조합 피해자 87명까지 늘어... "조합측 책임져야" 분통 조합원 선정 과정 의혹도 제기... 경찰, 전면수사 확대할지 주목

광주 동구 자산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사가 <광주일보 6월 11일자 6면>와 관련, 피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아놓았던 돈을 하루 아침에 날려버린 뒤 매일같이 조합 사무실을 찾아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조합이 위탁한 업무대행사를 믿고 아파트 계약금 등을 납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점에서 조합측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기 피해자 100명 넘나=15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자산주택조합 사기 사건과 관련, 지난 14일까지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총 87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9일 27명의 무주택 서민들이 17억원의 계약금을 뜯겼다고 신고한 이후 11일 53명(40억원)으로 늘더니 이날까지 87명으로 급증했다. 이들이 추정한 피해 금액도 57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후시나 자산주택조합을 찾아 지정된 계좌로 제대로 계약금 납입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는 주민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피해자가

100명에 이를 것이라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15일에도 광주시 동구 자산동 자산주택조합 사무실은 피해 여부를 확인하려는 조합원들과 대책을 내놓으라며 조합을 찾아 항의하는 피해자들이 뒤섞이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조합원들의 거친 목소리가 사무실 입구까지 들릴 정도로 높았다. 일부 주민들은 조합 계약서를 살피다 지정 계좌가 아닌, 업무대행사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서 부랴부랴 경찰서로 달려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피해자들은 "업무대행사가 내민 계약서 밑에 지정 계좌번호가 있더라도 다른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서 보내라고 하면 누가 의심하겠나"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때

문에 피해자들은 업무대행사뿐만 아니라 조합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무대행사가 계약금 납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 책임을 소홀히 해 애꿎은 조합원 피해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부실한 조합원 관리도 문제=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택조합의 부실한 조합원 선정 및 관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조합을 찾은 한 주민은 "지난 2017년, 계약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데도, 토지를 가진 지주 몫으로 조합원 분양권을 넘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기존 계약금보다 3000만원 싸게 계약했다"며 피해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자칫 사실 여부에 따라 조합원 선정 과

정부터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자산주택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조합측은 분양 사기 피해에다, 조합원 선정 과정의 부정 의혹마저 제기되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산주택조합장은 "조합원들 피해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피해 여부와 규모를 전 조합원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부경찰도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피해 규모를 구체화하는 한편, 업무대행사 대표와 직원 등 3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페이스북 대화방으로 외모 순위 매긴 건 무죄" 법원 "심각한 내용 해당 안돼"

지난해 3월 인천 한 고등학교 2학년이던 A군은 친구 2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의 외모 순위를 매겼다. 같은 학교 여학생 여러 명의 이름이 대화방에서 오르내렸고, 성적인 표현이 적힌 사진도 공유됐다. 이들의 대화 내용은 대화방에 이름이 오르내린 한 여학생이 알게 되면서 드러났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여학생의 신고로 A군 등의 메신저 대화방이 사이버성폭력 등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학교장은 학폭위 의결에 따라 A군에게 출석정지 5일, 학급 교체,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여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 징계 처분을 했다.

A군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 조치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고연금)는 15일 지난해 4월 학교장이 A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3명만 있는 메신저에서 그런 대화이 이뤄졌고 직접 피해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다"며 "전후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놀리고 장난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 표현이 명예훼손·성폭력에 해당하거나 음란정보와 같은 심각한 내용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학교 폭력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징계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수백억 투자 사기' 3개월 지나 출국금지 신청이라니...

용의자 소재 파악 못해 수사 답보 건설사 3곳도 100억 넘는 피해

50대 여성 사채업자의 수백억 규모 투자 사기사건 <광주일보 6월11일자 6면>과 관련, 경찰 수사가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지 3개월이 넘어서

야 출국 금지를 신청, 수백억원대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수사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2개월이 넘도록 용의자 소재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경찰 수사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거액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되자 피해 조사를 거쳐 50대 여성 사채업자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

목,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하지만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특히 최초 피해 신고가 들어온 지 3개월이 지나서야 관련자들에게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데 따른 비판도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알려진 업체의 피해 규모도 더 늘었고 이들 외에도 100억원 넘는 사기를 당했다는 증권 건설업체도

두 곳이나 되는 등 전체 피해액만 400억원대에 이른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태. 지역 유력인사들에게 수백억원대 돈을 받아 가로채 행적을 감춘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해외 도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국 금지 등을 서둘렀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피해자들 사이에는 "경찰이 용의자 한 명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줄 몰랐다"는 답답함이 터져나온다. '수사 진행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 외에 아무런 진척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강력사건도 한 달이면 잡아내는데 2개월이 넘도록 구체적 피해 현황, 규모, 용의자 소재 파악하지 못한다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하는 실정이다. 광주서부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로, 해외 출국 기록은 없어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000샘플 여론조사, 가중치 적용 1000명 돼야 하나?

"가중값 적용 여부 불분명"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패소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각 기관별로 샘플 수를 1000명으로 한다'고 합의했다면 응답률이 못 미치더라도 1000명만 데만 전화를 거는 게 맞을까. '가중값' (응답률이 낮은 표본층의 응답 결과를 몇 배로 보정할지 정하는 수치)을 적용해 1000명의 답을 얻어야 될까. 광주지법 민사13 단독 이차용 부장판사는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이 여론조사기관인 A·B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오섭 전 광주시의원과 광주 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설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고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양측은 외부 추천을 받아 선정한 2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3일 간 전화자동응답방식(ARS RDD)의 유선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샘플 수는 '복구 갑'을

주민을 대상으로 기관별 1000샘플로 한다'고 합의서에 적었다. 2개 여론조사기관이 이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들 간 1000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가중값을 적용, 각 905명과 934명으로 산정된 인원 수로 계산한 여론조사결과를 통보하자 문 전 의원은 "애초 1000명 조사에 미달되는 결과"라며 반박하는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냈다. 문 전 의원은 또 잘못된 조사결과로 민주당 북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정신적 고통 등을 주장하며 위자료 등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결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가중값을 적용한 결과사례 수가 1000명이 돼야 한다는 문 전 의원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합의서에는 '기관별 1000샘플로 한다'고 적혀있을 뿐 '가중값을 적용하기 전의 값'인지, '가중값을 적용한 후의 값'을 말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취약계층 위한 콜스카프

15일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폭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등 3260세대의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콜스카프 등 지원물품을 포장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풍력발전시설 기준 완화 화순군의회 조례안 부결

화순군의회가 풍력발전시설 허가 기준(거리)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광주일보 2020년 6월 12일자 6면)을 부결시켰다. 15일 화순군의회에 따르면 화순 이선 의원은 화순군의회 제239회 정례회에 '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상정했다. 하지만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부결됐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토의를 거쳐 전 의원의 동의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발전시설 허가 제한 거리 기준을 '기존 10가구 이상 거주하는 마을에서 2km 이내'이던 것을 700m 이내로 대폭 완화한 게 핵심이었다. 또 '10가구 미만 마을의 경우 마을에서 1.5km 이내'이던 것을 500m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역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물건	경매 물건
<p>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p> <p>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조정가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p> <p>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29억 5천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p>	<p>의료시설 ▶ 전남 영암군 영암읍 남풍리 토지 : 17079㎡(5166.4평) 건물 : 9059.72㎡(2740.6평) 감정가 79억 1천5백만원 최저가(56%) 11억5천7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동수동 토지 : 4561.8㎡(1379.9평) 건물 : 3334㎡(1008.5평) 감정가 57억 4천6백만원 최저가 (36%) 20억 6천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토지 : 16529㎡(5000평) 건물 : 1296㎡(392평) 감정가 28억8천7백만원 최저가 (70%) 20억 2천1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운곡동 토지 : 14000.1㎡(4235평) 건물 : 586㎡(177.3평) 감정가 22억 2백5십만원 최저가 (70%) 15억4천2백만원</p> <p>공 장 ▶ 전남 나주시 문평면 동원리 토지 : 2051㎡(620.4평) 건물 : 451.1평 감정가 10억2백5십만원 최저가 (70%) 7억2백만원</p>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